



목 차

〈예비타당성조사〉

■ 국토교통부	1
1. 구마-군위 고속도로 신설사업	2
■ 환경부	3
2. 목감천 치수대책사업(2단계)	4
3.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복선화사업	5
■ 보건복지부	7
4.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	8
■ 해양수산부	10
5.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	11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

■ 기획재정부	14
6.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	15
7.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	17
■ 외교부	19
8.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청사 매입	20

■ 경찰청	21
9. 부산 연제경찰서 신축	22
10. 서울 영등포경찰서 통합청사 신축	23
■ 환경부	24
11.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	25
■ 보건복지부	26
12.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	27
■ 국토교통부	29
13. 용인 처인 이동~남동(국도45호선) 이설확장	30
■ 교육부	32
14. 경북대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	33

<예비타당성조사>

국토교통부

1. 구미-군위 고속도로 신설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구미-군위 고속도로 신설사업	
② 총사업비 (국고)		14,521억원 (국고 : 6,567 도공 : 7,954)	③ 사업기간 25년 ~ 35년 (공사 7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도 공		
⑤ 사업목적		○ 국가간선도로망(10x10+6R ²) 동서4축 지선구간으로 대구·경북통합 신공항 이전 예정지(군위,의성)의 접근성 강화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 ○ 구미 국가산업단지 주변 고속도로 네트워크 강화로 산업·물류 경쟁력 향상과 낙후 지역인 군위·의성 지역의 국토 균형발전 지원	
⑥ 성과지표		○ 해당없음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- 국가도로망 종합계획('21~'30) -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('21~'25)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구미-군위 고속도로 신설사업 ○ 사업물량 : 21.2km, 4차로 신설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 (국토교통부, 한국도로공사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→타당성평가(12개월)→기본설계(14개월) →실시설계(18개월)→공사시행(신설 7년)	
⑩ 재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보조 (국비에 따른 도공 매칭) ○ 재원분담 : 국고 6,567억원, 도공 7,954억원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공사비 40%, 용지비 100%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 한국도로공사 운영(통행료)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운영주체 : 한국도로공사 ○ 운영계획 : 전국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통합채산제 운영	
⑫ 사전용역		○ 수행	
⑬ 사업기대효과		○ 내륙지역(충남남부, 경북서부)과 경북 군위·의성을 연결하는 동서 4축 지선으로 국가간선도로망 보완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 ○ 구미 국가산업단지(1~5단지) 주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고 산업·물류 경쟁력 향상	

〈예비타당성조사〉.

환경부

2. 목감천 치수대책사업(2단계)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목감천 치수대책사업(2단계) (수자원, 하천)	
② 총사업비 (국고)		4,063억원 (국고: 4,063억원)	③ 사업기간 26년~31년 (6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지자체· 기관		
⑤ 사업목적		○ 목감천 유역의 상습적 홍수피해 발생 및 하류부의 하도개선 한계 도달로 치수안전도 향상(계획빈도 100년)을 위한 홍수조절시설(R2·R3저류지) 설치	
⑥ 성과지표		○ 성과지표명 : 홍수저류지 조성 ○ 측정 산식 : 추진사업의 공정율(누계) ○ 측정 방법 : 목표대비 실적율(%)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- 하천법 제25조(하천기본계획) - 하천법 제27조(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·보수)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- 2005. 01. : 안양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(건설교통부) - 2010. 12. : 안양천 유역종합치수계획(변경) 수립(서울지방국토관리청) - 2016. 05. :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(서울지방국토관리청) - 2019. 01. : 목감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(경기도) - 2020. 10. : 목감천 하천기본계획(일부변경) 수립(서울지방국토관리청) - 2024. 01. : 하천구역 결정 고시(저류지3개소,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-19호)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목감천 치수대책사업(2단계)(국가하천, 경기도 광명시) ○ 사업물량 : 저류지 2개소 설치(A=23.4만㎡, V=184.8만㎥) - R2 저류지 : A=17만㎡, V=139.2만㎥, R3 저류지 : A=6.4만㎡, V=45.6만㎥ ※ 기 추진 사업 : R1 저류지(A=23.9만㎡, V=256.5만㎥), 하도정비(12.86km) 등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- 하천기본계획 → 예비타당성조사 →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→ 공사 → 유지관리	
⑩ 자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직접시행 ○ 자원분담 : 국고 100%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전액 국비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운영주체 : 국가(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) ○ 운영방안 : 하천시설 유지관리 ○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: 국비	
⑫ 사전용역		○ 수행	
⑬ 사업기대효과		○ 2단계 사업(R2,R3저류지) 사업을 통해 상류 유입량을 추가 조절하여 목감천의 계획빈도(100년) 홍수방어 개선 효과 기대	

3.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1,357억원 (국고 : 407억, 수공 : 950억원 등)	③ 사업기간	2026년 ~ 2032년 (7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지자체·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는 '23년 기준 부여군, 논산시, 공주시, 세종시 4개 지자체에 생·공용수 126천㎥/일 공급 중이며, 국가 수도기본계획('22. 환경부)에 따라 장래 158천㎥/일 공급계획 ○ 해당 광역상수도는 단선관로로써 사고 발생시 비상연계 물량의 한계로 대규모 단수사고 발생 등 수요자 생활불편 유발 및 막대한 사회·경제적 피해 예상 ○ 따라서,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를 시행하여 사고 등 비상시에도 중단없는 용수공급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및 국민의 물 복지 향상		
⑥ 성과지표		○ 성과지표명: 광역상수도 안정성 ○ 측정 산식: 연간 광역상수도 안정화 실적 ○ 측정 방법: 관로 안정화 사업의 관로연장을 관련문서 및 내부 자료로 확인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수도법 제4조(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)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- '21. 12 : 충남중부권광역 관로 복선화사업 타당성조사(환경부) - '15. 8 :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(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) 변경 - '22. 10 :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(환경부)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도·송수관로 중 관로사고시 단수가 발생하는 단선 구간에 대한 복선화를 통해 단수사고 예방 및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○ 사업물량 : 관로 38.1km(D900~500mm), 가압장 개량 46천㎥/일	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환경부 장관(한국수자원공사 시행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- 예비타당성조사 → 기본 및 실시설계 → 공사→준공		
⑩ 자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국고현금출자 ○ 자원분담 :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국고 30%, 한국수자원공사 70%	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운영주체 : 한국수자원공사 ○ 운영방안 :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광역상수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시행 ○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: 사업준공 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및 수도시설 유지관리 (재산권 : 환경부, 시설운영권 : 한국수자원공사)		

⑫ 사전용역	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○ 단선관로 복선화를 통한 대규모 단수사태 등으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손실 예방 ○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

<예비타당성조사>.

보건복지부

4.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(건축)	
② 총사업비 (국고)		2,304억원 (국고:2,304억원)	③ 사업기간 2025년 ~ 2029년
④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 · 기관		
⑤ 사업목적		○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망률 감소 ○ 감염병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○ 응급·심뇌혈관 등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등 지역인프라 연계·협력 강화(거창권 공공의료본부 역할 확대)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(법률 제17778호) 제7조(사업) 적십자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2. 전시(戰時)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4. 의료사업(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), 응급구호사업, ...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「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」(대통령실)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· “(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)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,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”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· “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” · “(필수·공공의료 강화)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·응급·중증외상·분만 등 필수·공공의료 인력·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” 120 지방소멸방지,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· “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,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 기대” 「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」(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 합동) 「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(2021~2025)」(보건복지부) 「대한적십자사 정관」 제45조(업무) 제45조(업무) 적십자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 4. 병원, 이동진료소,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등의 의료사업 7. 보건지식, 가정보건, 언어치료, 무료진료 등 지역보건사업	

⑧ 사업규모	○ 사업내용 :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- 병원구분 : 종합병원, 공공보건의료기관(「공공보건의료법」) ○ 사업규모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병상수</td><td>진료과수</td><td>대지면적</td><td>연면적</td></tr><tr><td>기존</td><td>91병상</td><td>9개</td><td>3,143㎡</td><td>5,817㎡</td></tr><tr><td>이전신축</td><td>300병상</td><td>18개</td><td>22,155㎡</td><td>41,603㎡</td></tr><tr><td>증가분</td><td>209병상</td><td>9개</td><td>19,012㎡</td><td>35,789㎡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비고</td><td>음압격리</td><td>20병상</td><td rowspan="4">신경과, 신경외과, 정신건강의학과 등 종합병원 요건 지역주민 요구도를 반영</td><td rowspan="4"></td></tr><tr><td>요양</td><td>50병상</td></tr><tr><td>호스피스</td><td>10병상</td></tr><tr><td>중환자실</td><td>20병상</td></tr></table>	구분	병상수	진료과수	대지면적	연면적	기존	91병상	9개	3,143㎡	5,817㎡	이전신축	300병상	18개	22,155㎡	41,603㎡	증가분	209병상	9개	19,012㎡	35,789㎡	비고	음압격리	20병상	신경과, 신경외과, 정신건강의학과 등 종합병원 요건 지역주민 요구도를 반영		요양	50병상	호스피스	10병상	중환자실	20병상
구분	병상수	진료과수	대지면적	연면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존	91병상	9개	3,143㎡	5,817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전신축	300병상	18개	22,155㎡	41,603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증가분	209병상	9개	19,012㎡	35,789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고	음압격리	20병상	신경과, 신경외과, 정신건강의학과 등 종합병원 요건 지역주민 요구도를 반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요양	50병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호스피스	10병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환자실	20병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사업추진체계	○ 사업수행주체 : 대한적십자사(공공기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⑩ 재원조달방식	○ 지원형태 : 국비보조 ○ 재원분담 : 국고 100%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총사업비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⑪ 사업운영체계	○ 운영주체 : 거창적십자병원(「대한적십자사 정관」상 분사무소) - 국비를 투입하여 병원시설 건립 - 현재 운영 중인 거창적십자병원의 이전 -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직접 운영 ○ 운영방안 - 운영내용 · 거창권(거창·함양·합천) 내 유일한 공공종합병원으로서 권역 내에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등 국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및 역할 수행 · 감염병 등 재난위기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기관 연계체계의 중간역할 수행 ·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정부 지정센터(심뇌혈관질환·응급센터 등)와 필수의료 협의체 구성 및 협력사업 추진 - 운영인력 <table><tr><td>직종별</td><td>의사직</td><td>간호인력</td><td>약무인력</td><td>보건직</td><td>행정기술직</td><td>합계</td></tr><tr><td>인력(명)</td><td>34</td><td>214*</td><td>8</td><td>68</td><td>70</td><td>394</td></tr></table>	직종별	의사직	간호인력	약무인력	보건직	행정기술직	합계	인력(명)	34	214*	8	68	70	394																	
직종별	의사직	간호인력	약무인력	보건직	행정기술직	합계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력(명)	34	214*	8	68	70	394																										
⑫ 사전용역	○ 수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⑬ 사업기대효과	○ 이전신축 후 30년간 발생하는 편익 - 발생되는 교통비 및 이동시간 절감 편익 -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통한 응급사망 감소 편익 - 진료대기시간 및 주차시간 감소에 따른 편익 - 조기재활치료에 따른 의료비 및 생산성 손실 절감 편익 - 음압병실 확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감소 편익 ○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- 설립과정에서 불가피한 탄소배출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친환경 건축물 설립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절감에 기여하여 환경적 부정 영향 최소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〈예비타당성조사〉.

해양수산부

5.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(건축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1,900억원 (국고: 1,294억원 지방비: 606억원)	③ 사업기간	'25년 ~'28년 (4년)
④ 추진 주체	주관 부처			
	지자체 ·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 (개요) 환황해권 수산업 생산거점과 대규모 소비지역(수도권·충청권)으로 연결이 용이한 충남에 ‘중부권 수산식품 클러스터’를 조성하여 미래 K-블루푸드 수출 핵심품목 육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* ('22년말 인구수) 수도권 26,053천명(50.5%), 충청권 5,669천명(10.1%) - 수산식품 가공·저장·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 새우를 연중 상시 공급하고 새우 및 충남의 다양한 원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로 국내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산업화 도모 ○ (가공) 친환경 스마트양식단지 인접부지에 새우 가공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는 국내 첫 사례로 양식·가공연계를 통해 양식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○ (기업지원) 역량있는 (청년)창업기업 및 영세한 지역 수산식품기업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혁신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도내 수산식품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 - 임대공간 마련으로 비용절감 및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○ (연계) 사업 예정지(당진시 석문산단-간척지) 인근의 스마트 양식단지에서 원물 공급 및 LNG 생산기지의 미활용 에너지를 저온물류시설과 가공공장 운영에 활용(기존 전기료 70% 절감 효과)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- 국정목표(110대 국정과제) -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'21.2. 시행) 제13조 (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·육성) - 제2차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계획('21.3.) - 제1차 수산식품 산업 육성 기본계획('21.3.) - 수산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('21.12.) - 민선8기 도정운영방향 및 도정과제 ('22.6.) - 충청남도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 ('22)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규모 - (주요시설) 스마트 가공처리센터,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,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 3개 시설 및 LNG활용설비 구축 예정		

	시설	연면적(㎡)	구성
	스마트 가공처리센터	12,600	새우가공시설, 부산물 분말화시설, 업무시설
	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	11,430	기업입주공간 8개, 공용급속동결실, 창업 및 임대사무실, 그 외 업무시설
	상생형 저장물류센터	17,000	저장존(냉장냉동창고 등), 물류존(풀필먼트 등)
	LNG활용설비	-	LNG냉열 공급을 위한 장비, 배관 등 설비 구축
	○ 사업내용 - (스마트 가공처리센터) 공동가공장비 활용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효율적 저차가공 기반 마련 · 주요 품목인 새우 저차가공(크기별, 손질유형별)을 위한 자동화시설 구축 · 새우 저차가공을 위한 지역 일자리(크기선별, 껍질·내장 제거) 창출 · 새우부산물을 활용한 분말화→양어사로 공급으로 자원 선순환 및 향후 해양바이오센터와 협력사업을 통해 R&D 지원 및 공동 인력양성 지원 - (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) 저차가공된 새우 및 지역내 다양한 원물을 시험분석 등 공동연구장비 활용하여 고차가공을 통한 기업비즈니스 혁신(창업·생산) 및 기업성장 지원 · 가공기업 입주 및 창업공간 지원을 통해 새우 등 충남 특화 수산 원물을 활용한 고차 가공식품 개발·생산 · 블루푸드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클러스터 연구장비 활용 및 공동기술 개발, 수산식품 R&D 지원 - (상생형 저장물류센터) 수산원물 및 식품기업의 제품보관, 수도권·충청권 소비지 배송 및 수출물류 지원 · 온라인 물류플랫폼 기업과의 상생·연계를 통해 수산식품기업의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산식품 소비·수출 확대 - (LNG활용설비) 인근 LNG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감 실현 · 지역 수산식품기업에 다양한 원물 및 제품 동결·보관 지원하고, 에너지 절감비용 만큼 기업에게 30~50% 저렴하게 지원 * 급속동결 기술 등을 통해 수산원물 및 제품의 신선도 및 품질을 유지, 저렴한 비용으로 급속동결 및 냉동·냉장창고 임대		
⑨ 사업추진체계	○ 사업수행주체 : 해양수산부(주관부처), 충청남도·당진시(주체) - 주관부처 : 해양수산부 - 추진주체 : 충청남도, 당진시 - 추진체계 : 수산식품클러스터 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충청남도, 당진시와 함께 3개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총괄 추진하며, 기술자문단,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준비 및 운영 추진		
⑩재원조달방식	○ 지원형태 : 자치단체자본보조 ○ 재원분담 : 국비 1,294억원, 지방비 606억원 ○ 국고지원 비율 : 70% (농특회계)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- 충남도·당진시(출연재단 등)에서 운영 - 향후 클러스터 운영 시 발생하는 임대수입, 충남도·당진시 자체 수산식품기업 육성 및 수출분야 예산, 정부 공공사업 위탁 등으로 충당할 예정		
⑪사업운영체계	○ 운영주체 - 충남도 및 당진시 지도·감독하에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관리주체가 되어 운영(향후 충남산학융합원, 당진시시설관리공단 등 위탁운영)		

	○ 운영방안 - (운영비)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(경상운영비, 사업운영비)로 구성 · 운영비 연간 약 102억원, 인건비 연간 20.6억원(운영인력 35명 기준) - (운영수익) 새우 저차가공수익, 부산물 분말화 비용, 임대료, 장비사용료, 급속동결료, 냉장냉동보관비용, 풀필먼트센터 임대료 등으로 구성
⑫ 사전 용역	○ 수행
⑬사업기대효과	○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 - 본 사업부지는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인 당진시 석문면 국가산업단지내 수산단지 일원으로 도시 생활지역에 해당 없어 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- 당진 LNG 생산기지의 냉열을 활용한 시설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 단지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대 - 건축물 옥상녹화, 태양광 전지패널, 친환경 인증자재 활용 등을 통한 자체 에너지 생산 및 손실 최소화 실현 ○ 기타 - 국내 최초 새우 가공기반 구축으로 양식새우의 100% 활용 및 수출유망 품목으로 육성 가능 -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과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충남을 중부권 수산식품 중추기지로 육성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.

기획재정부

6.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※ 사업유형 : 건축(공공청사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914억원 (국고: 914억원 지방비: - 민자: -)	③ 사업기간	25년 ~ 30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
	지자체 · 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 민간 임차 중인 수성세무서 및 인근기관 청사 수요를 통합하여 청년창업시설이 포함된 비축청사와 함께 복합 개발 - 기존 수성세무서 사무공간 부족(협소도 49.6%)에 따라 '2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확정 - 부지 수요조사 결과 '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', '대구수성우체국' 입주 희망, 통합청사를 개발하여 행정서비스 집적화 및 재정절감 도모 - 비축청사 일부를 청년창업시설로 활용하여 정부 청년정책 지원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- 국유재산법 제57조,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청사 및 정책지원시설 조성 - 정부 120대 국정과제(No.90, 청년창업 기반 강화) 지원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- 비축토지 활용방안으로 수성세무서와 함께 청년창업시설을 일부 포함한 통합청사 복합개발 검토 - 국세청과 협의 완료 및 입주희망기관 수요조사 완료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- 예정부지 : 대구시 수성구 이천동 53-2 - 총사업비 : 914억원(전액 국고 지원, 국유재산관리기금) ○ 사업물량 : 총연면적 29,178㎡	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기획재정부), 수탁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)		
⑩ 재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국유재산관리기금 전액 지원 ○ 재원분담 : 전액 국고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100%(국유재산관리기금)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- 통합청사 입주기관의 관리비(각 부처 일반회계 예산)로 총당	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사업성격 :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기금개발사업 ○ 법·규정 적용 :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특정하는 법·규정을 제외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, 계약체결, 인허가 등 사업추진		

	과정에서 사업주체를 ‘국가’로 해석하여 적용 ○ 수행체계 : 기획재정부 주관, 개발 사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-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요기관 간 개발기간 중 협의체계를 구성,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 협의 ○ 관리체계 :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발재산의 관리·처분을 실시, 입주 공공기관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○ 관리방법 :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입주 공공기관은 사용협약 체결 - 사용협약은 사용재산, 관리비 정산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별도로 작성하는 건물관리지침, 사안별 협의에 따라 관리 ○ 관리용역 :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○ 관리비 :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지관리비용을 선 지출하고 매월 입주기관 및 민간임차인에게 청구, 실비 정산
⑫ 사전용역	○ 미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○ 저활용 국유지의 최유효 활용 도모 ○ 대구광역시 내 임차·노후 공공청사 수요 통합으로 재정절감 및 對국민 행정서비스 집적화 제고 ○ 주변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(주변시세의 약 70%)의 청년창업시설 공급을 통해 국정과제 지원

7.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※ 사업유형 : 건축(공공청사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564억원 (국고: 564억원 지방비: - 민자: -)	③ 사업기간	25년~30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
	지자체 · 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 기존 영도경찰서 부지에 노후화된 영도경찰서, 영도구선관위 청사 수요를 통합, 잔여 용적률을 활용한 지역주민공간과 함께 복합 개발하여 국유지 활용도 제고 - 영도경찰서 본관동은 '88년에 준공(경과연수 36년)되었으며, 건물 내·외부 균열로 안전,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 초래 - 영도구선관위는 '68년에 준공(경과연수 56년)되어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이 과다 발생하며,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구조안전성이 취약('21년 안전도 C등급) -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잔여 용적률을 활용한 부대편익 시설 등 일부 설치,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유재산 활용 추진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- 국유재산법 제57조,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청사 및 정책지원시설 조성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- 영도구 내 인접한 노후 공공청사인 영도경찰서와 영도구선관위의 청사 수요 통합 개발 검토 - 경찰청 및 중앙선관위와 협의 완료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- 총사업비 : 564억원(전액 국고 지원, 국유재산관리기금) ○ 사업물량 : 총연면적 17,547㎡	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기획재정부), 수탁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)		
⑩ 재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국유재산관리기금 전액 지원 ○ 재원분담 : 전액 국고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100%(국유재산관리기금)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 - 통합청사 입주기관의 관리비(각 부처 일반회계 예산)로 충당	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사업성격 :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기금개발사업 ○ 법·규정 적용 :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특정하는 법·규정을 제외하고		

	예산 편성 및 집행, 계약체결, 인허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주체를 ‘국가’로 해석하여 적용 ○ 수행체계 : 기획재정부 주관, 개발 사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-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요기관 간 개발기간 중 협의체계를 구성,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 협의 ○ 관리체계 :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발재산의 관리·처분을 실시, 입주 공공기관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○ 관리방법 :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입주 공공기관은 사용협약 체결 - 사용협약은 사용재산, 관리비 정산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별도로 작성하는 건물관리지침, 사안별 협의에 따라 관리 ○ 관리용역 :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○ 관리비 :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지관리비용을 선 지출하고 매월 입주기관 및 민간임차인에게 청구, 실비 정산
⑫ 사전용역	○ 미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○ 저활용 국유지의 최유효 활용 도모 ○ 부산광역시 내 노후 공공청사 수요 통합으로 재정절감 및 對국민 행정서비스 집적화 제고 ○ 잔여 용적률을 활용하여 공공청사의 부대편익시설을 일부 설치,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유재산 활용 추진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.

외교부

8.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청사 매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주오스트리아대사관 청사 매입사업(공공청사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675억원 (국고: 675억원)	③ 사업기간	25년 ~ 29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
	지자체·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 현재 대사관 청사의 노후도(건령 126년) 및 협소도 등을 고려, 신규 청사 매입 이전 추진		
⑥ 성과지표		○ 해당사항 없음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해당사항 없음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기존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○ 사업물량 : 부지 1,004㎡, 건물연면적 4,026㎡	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외교부(국가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- 매입(2025~2026년), 리모델링(2027~2029년)		
⑩ 재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정액 지원 ○ 재원분담 : 국고(국유재산관리기금)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100%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국고지원	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운영주체 : 주오스트리아대사관 ○ 운영방안 : 자체운영 ○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: 국고지원		
⑫ 사전용역		○ 미수행		
⑬ 사업기대효과		○ 국가 위상에 맞는 외교활동 기반 조성 ○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재외공관 안전성 확보 ○ 동포사회의 자긍심 고취 및 동포와 함께하는 외교 공간 마련		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.

경찰청

9. 부산 연제경찰서 신축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부산 연제경찰서 신축(공공청사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505억원 (국고 : 505억원)	③ 사업기간	'25년 ~ '30년 (4단계 6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지자체 · 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 노후 협소한 청사 신축을 통해 근무환경개선 및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- 32년 경과, 협소율 48%로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며, 개보수 등 관리유지의 어려움 발생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(경찰의 사무) - 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제42조(경찰서) 제58조(시도청 하부조직) - 국유재산법 제26조의5, 제26조의6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-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 협의. 심의 -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협약 체결 등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부지 8,349㎡(현부지 재건축) - 사업대상지 (부산 연제구 연산동 243-11) 제3종주거지역 - 건폐율 50%이하 용적율 300%이하 ○ 사업물량 : 연면적 15,748㎡, 지하1층 지상6층	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경찰청(부산경찰청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: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→ 공공건축 심의 →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협약 → 설계 공모 → 설계용역 → 시공사 조달 입찰 → 공사		
⑩ 재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정액 지원 등 ○ 재원분담 : 국고 (전액 국고 지원)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100%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 국유재산관리기금 순차적 지원	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운영주체 : 경찰청(부산경찰청) -국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 ○ 운영방안 : 부산연제경찰서 직접 운영		
⑫ 사전용역		○ 미수행		
⑬ 사업기대효과		○ 본관동 외벽 타일 형태 시공으로 노후에 의한 탈락 및 낙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해소 ○ 사무공간 및 민원인 대기공간 부족하여 방문민원인 불편 초래 해소 ○ 피의자, 피해자 대기공간 부재에 의한 인권 침해성 문제 해소 ○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자 만족도 향상 및 방문 민원인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		

10. 서울 영등포경찰서 통합청사 신축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서울 영등포경찰서 통합청사 신축(공공청사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1,359억원 (국고 : 1,359억원)	③ 사업기간	'25년 ~ '32년 (4단계 8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지자체 · 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 국유재산 활용 극대화로 효율성 제고 - 신축부지는 법정용적률 400%로 현 청사만 재건축시 계획용적률 163%로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도 저하 - 이에 서울청에서 관할구분에 제한 없는 기동단 및 사건기록관 신축 사업을 병합, 통합청사로 추진하여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○ 통합청사 추진관서 현황 - (영등포경찰서) 노후도 32년, 협소도 58.6%, 안전도 C등급 - (4기동단) 노후도 37년, 협소도 33%, 안전도 C등급 - (사건기록관) 신설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- 국유기금 지침상 노후관서(30년 이상, 협소도 60% 이하) 신축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- '24~'28년 국유기금 중기사업계획서 제출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현부지 신축 -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-11(9,526㎡) ○ 사업물량 : 건축물 43,309㎡(지하4, 지상9층) 규모의 통합청사 신축	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경찰청(서울경찰청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: '25년 사업적정성 검토 → '26년 기본설계 → '28년 실시설계 → '29년 착공 → '32년도 준공		
⑩ 재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국가 전액 지원 등 ○ 재원분담 : 국고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100%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	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운영주체 : 경찰청(서울경찰청) ○ 운영계획 : 준공 후 경찰서에서 시설관리		
⑫ 사전용역		○ 미수행		
⑬ 사업기대효과		○ 통합청사 추진으로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○ 안전한 건축물 확보로 직원 및 민원인에게 안정적 환경 제공 ○ 신축공사로 근무환경 개선하여 경찰 근무의욕 고취 ○ 민원인 민원업무 장소 협소를 해결하여 경찰 이미지 개선		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.

환경부

11.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(하수도 / 수해예방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990억원 (국고:594억원 지방비:396억원)	③ 사업기간	'22년 ~ '28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
	지 자 체 ·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약대오거리 일원 반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수해 대책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,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<최근 침수사례> - '10.9.21 집중호우75mm/hr 건물 2,530동 및 약대오거리 일원 등 침수 - '11.7.27 집중호우58mm/hr 건물 1,612동 및 약대오거리 일원 등 침수 - '22.8.8 집중호우77mm/hr 건물 및 약대오거리 일원 등 침수		
⑥ 성과지표		○성과지표명: 수해대책 신속한 추진을 통한 침수해소('23~'28년) ○측정 산식:추진절차 성과로 제출 <계획('23)→설계('25)→공사('28)> ○측정 방법: 단계별 진행성과(결과)로 측정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(1)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(책무)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,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(2) 하수도법 제11조(공공하수도의 설치 등) 및 제63조(국고보조)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- 2022.11. :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- 2023. : 삼정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- 2024.2. : 부천시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대책 수립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하수저류터널, 빗물펌프장 신설 ○ 사업물량 : D7,000mm(L=1,027m), Q=3,800m³/분	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부천시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: - 하수도정비대책 수립('24)→하수도정비기본계획(변경)('24)→기본 및 실시설계('25)→공사시행('26~28)		
⑩ 자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○ 자원분담 : 국고:594억원 지방비:396억원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60% / 40%(지방)	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운영주체 : 부천시 ○ 운영계획 : 우기별/상황별 운영메뉴얼을 작성하여 신속한 수해예방 대책을 추진		
⑫ 사전용역		○ 수행		
⑬ 사업기대효과		○ 반복침수 예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○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신속한 대응		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.

보건복지부

12.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(보건)		
② 중기재정지출		2조 6,570억원	③ 사업기간	지속사업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
	지자체·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 (근로·교육환경 개선)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환경*을 개선하여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* 주당 근로시간('22년) : 전공의 77.7시간 ↔ 임금근로자 36.5시간 - 병원 내에서 지도전문의를 통한 체계적 교육운영과 충분한 임상경험과 술기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○ (의료서비스 질 제고) 병원에서 진료·수술 등을 수행하는 전공의의 근무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개선 통해 환자 안전 제고 * “근무시간 제한 정책은 레지던트의 의료 오류 위험을 낮춤”(영국의학저널, '22년) - 역량있는 전문의 배출을 통해 향후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○ (사회적 책임 부여) 국가의 수련비용 지원으로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명확히 하고,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요구 -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수련을 마친 전공의가 지역·필수 분야로 유입되고, 병원도 전공의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- (국정과제) 66-1 “필수의료 인력·인프라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지원”(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,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) - (의료개혁 핵심과제) 의료개혁 5대 재정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발표(4.25.) - (법적근거) 「전공의수련환경개선및지원향상을위한법률」 제34조(의지지원) - (관련계획) 필수의료 혁신전략('23.10.), 필수의료 정책패키지('24.2.)		
⑧ 사업규모		❶ (사업개요)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하고, 장래 전문의로서 소양과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병원의 수련여건 마련 지원 ❷ (지원방법) 다수 병원으로 구성된 수련병원 네트워크 지원 - 전공의 수련환경(프로그램)이 우수한 수련병원 네트워크를 인증하고, 인증받은 수련병원 네트워크에 대해 수련비용 지원		

	③ (지원대상) ▲적정 근무시간, ▲교육전담 전문의 운영, ▲교육 인프라 등 수련환경을 평가하여 50개 네트워크 선정 ④ (수련비용 지원)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네트워크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규모별로 보조금 차등 지급(분기별) ⑤ (수련운영 지원) 네트워크 내에서 내실있는 수련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, 기존 사업 연계 등 병행 추진 ⑥ (사회적 책임성 강화) 병원의 필수분야 전공의 육성 실적, 수련받은 전공의의 지역 유입실적 등도 사업계획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병원과 전공의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유도
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	○ 사업수행주체 : 보조사업자 선정 - 보조사업자를 통해 지원 네트워크의 전공의 수련시간,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조건미달 등 발생 시 보조금 지원 중단
⑩ 재원조달방식	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사업 ○ 재원분담 : 국가 지원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국고 100%(일반회계)
⑪ 사전용역	○ 미수행
⑫ 사업기대효과	○ (근로여건 및 처우)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 구조를 변화*시켜, 적정 근무시간 운영을 통해 전공의 대상 수련교육의 효과성 상승 *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 : (現) 36시간 → (後) 24시간 전공의 주당 총근무시간 : (現) 80시간 → (後) 70시간 이하 - ‘근로자’가 아닌 ‘교육생’으로서 병원 내에서 충분한 전공의 권익 보호체계 구축 ○ (전공의 교육환경 개선) 지도전문의를 통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여, 전공의의 충분한 임상역량 함양 * (現) 별도 전담전문의 부재 → (後) 전공의마다 전담 전문의 배치 ○ (의료질 향상) 적정 근무시간 운영을 통한 전공의 피로도 감소로 직접적 환자 안전을 제고, 또한 역량있는 전문의 배출을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상승 - 수련병원 의사인력의 3~40% 수준인 전공의 비율을 20%대로 낮추는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구조를 만들어, 진료역량 강화 ○ (지역·필수의료 기여) 전공의와 병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, 지역·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입 확대 - 필수의료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.

국토교통부

13. 용인 처인 이동~남동(국도45호선) 이설확장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용인 처인 이동~남동(국도45호선) 이설·확장사업 (도로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8,843억원 (국고:8,843억원)	③ 사업기간	'25년 ~ '31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지자체 · 기관			
⑤ 사업목적		○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“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”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에 선제적 대응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을 일원의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하여 국도45호선(이동~남동) 이설·확장사업 추진		
⑥ 성과지표		○ 성과지표명: 도로건설 공정률(%) ○ 측정 산식: 투입예산/총사업비(공사추진 실적) ○ 측정 방법: 공정보고서, 감리조서 등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- (법적근거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,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및 「도로법」에 따른 국도 건설사업 추진 - (정책발표) 「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」 : '23.3.15, 국토교통부·산업통상자원부,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」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: '23.7.20. 산업통상자원부 「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」 예타면제 추진 결정 : '23.9.4. 국토교통부, 비상경제장관회의 「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」 : '24.1.15, 국토교통부, 3차 민생토론회 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」 : '24.3.25, 국토교통부, 23차 민생토론회 「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 추진방안」 발표 : '24.6.26, 국토교통부, 경제관계장관회의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- 「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」 예타 면제 통보 : '23.11.24, 기획재정부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용인 처인 이동~남동(국도45호선) 이설 및 확장 ○ 사업물량 : 8차로 이설·확장 (L=12.53km)	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: (*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)		
⑩ 자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직접 ○ 자원분담 : 국고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100%(교통시설특별회계)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 국비		

⑪ 사업운영체계	○ 운영주체 : 국토교통부 장관 (서울지방국토관리청) ○ 운영방안 : 도로관리계획 수립시 마련 ○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: 도로관리계획 수립시 마련
⑫ 사전용역	○ 미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○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상습정체구간에 대하여 국도45호선을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‘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’ 등 주변지역 향후 교통수요에 선제적 대응 (기업) 반도체 양산시기(‘31년) 일정에 맞추어 연계도로 개통필요 ○ 화성~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까지 국도45호선을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완화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.

교육부

14. 경북대학교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사업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경북대학교 의대신관 개축사업(건축)	
② 총사업비 (국고)		874억원 (국고: 874)	③ 사업기간 25년 ~ 29년 (1단계 4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 · 기관		
⑤ 사업목적		○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「교육기본법」 제16조①항, 「고등교육법」 제7조①항 「국립대학회계법」 제4조①항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'교육부 및 의대 증원 해당 거점국립대학과 소요공간 확보 및 수업방안에 대해 협의(24.4월~). ※ '24년 신입생들의 수업거부로 인해 '25년 신입생과 유급생을 위한 강의실 마련 필요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노후 된 의대신관 및 강의동과 학생회관을 철거하고 추가증원 공간을 포함한 규모로 개축 및 증축 ○ 사업물량 : 기존연면적(21,861㎡) → 개축후 연면적(24,000㎡)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경북대학교(국가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: 설계 및 시설개선('25년) → 공사('26~'29년) → 운영('30년~)	
⑩ 재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정액 지원 ○ 재원분담 : 국고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100%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 국고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운영주체 : (건축사업) 국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하고 국립대학교(경북대학교)에서 운영 ○ 운영방안 : 개축사업으로 별도의 운영 방안 불필요 ○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: 별도의 운영재원 불필요	
⑫ 사전용역		○ 미수행	
⑬ 사업기대효과		○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시설확충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, 실습실, 진료 역량 확보	